

‘내부갑질 등’ 기강 무너진 광주·전남경찰

관할구역서 자전거 훔친 지구대 경관 송치 경찰서·파출소선 체포 피의자 도주 잇따라

광주·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관할구역 내 절도와 피의자 도주, 파출소 습격 부실 대응, 내부 갑질 등으로 잇단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일선 치안의 무너진 기강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안팎에서 거세다. 사전 점검 실패와 교육·훈련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가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A경위는 지난달 21일 오전 자신의 관할 근무 구역인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주상복합건물 자전거 거치대에서 세워진 40만 원 상당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훔친 자전거를 자택까지 끌고 가 자물쇠까지 채웠으며,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 ‘새 자전거를 타고 싶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자택 인근 화물차 적재함에서 사다리를 훔치다 검거돼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경계조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에선 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한 혐의를 받아 체포된 20대가 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달아났다.

당시 체포·호송을 맡은 경찰관들은 한 손에만 수갑을 느슨하게 찬 피의자를 차량에 홀로 놔둔 채 장구류 정리를 하다가 도주의 빌미를 줬다.

달아난 피의자는 21시간여 만에 인천에서 다시 붙잡혔다. 전남경찰은 호송 담당 경찰관 3명에 대한 검찰 조사를 냈다.

광주에서도 피의자 감시·관리를 소홀히 하고 도주 사실조차 뒤늦게 보고한 광산서 모 파출소 순찰팀장 B경감 등 2명이 징계위에 회부, ‘불문 경고’ 조치됐다.

이들은 지난 7월 27일 오전 30대 폭행 피의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다 놓친 뒤 적극적으로 쫓아가지 않았다. 1시간 15분이 지나서야 상급기관인 본서에 보고했다.

7시간 만에 피의자를 다시 붙잡았지만, 허술하고 안일한 피의자 관리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파출소가 피의자에 의해 습격당한 데도 피신에 급급했던 경찰관들도 있

었다. 전남경찰은 여수경찰서 모 파출소 순찰팀장 C씨와 팀원 2명 등 3명에게 감봉·견책 처분을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오전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 총을 쏘고 12초 만에 달아난 20대 남성을 곧바로 제압·검거하지 않고 10분가량 몸을 숨겼다.

현장 대응이 손을 놓은 사이, 파출소를 빠져나간 20대 남성은 무기를 든 채 도심을 활보하다 12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등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도덕적 해이도 도를 넘었다. 광주경찰은 동부서 과장급 D경정의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 분청에 징계해달라고 통보했다.

D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과도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D경정은 경감이던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의혹으로 경계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주서에서는 초과근무 시간을 부풀려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찰관 28명과 행정관 1명 등 29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경찰은 이들 중 15명에는 중징

계, 14명은 경계했다. 또 사기·공전 자기기록 위조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일부는 징계 내용·사유를 부인, 소청 절차에 나섰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관이 도둑이 라니 참담하다’, ‘피의자 도주는 변명 여지 없는 직무 태만이다’, ‘시민 불복이 없다’, ‘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 등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의 참여자처21 대표는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도리어 강탈하고, 제 할 일은 못 하고 있다. 과연 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기존의 공직 윤리 교육, 각종 훈련이 형식적이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서 내 동료 간 상호 평가제도와 적성 검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복무 기강이 해이하거나 일탈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며 “평소에도 이른바 ‘문제적 경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도주·부실 대처의 경우, 상황별 대응 훈련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경찰관 면책 강화 등 일선이 강력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 정비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환기자



강진경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강진고등학교, 강진여자중학교 등에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강진 Wee센터 합동하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양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 강화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는 광양서초등학교 앞에서 경찰, 협력단체, 학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광양=김지영기자



완도해경, 하반기 해상중합훈련 실시

완도해경경찰서(서장 김정수)는 해상사고 대비태세 확립과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2022년 하반기 해상중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무안소방, 화재초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차량교실 운영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지난 12일 안전체험과 교육 기회가 적은 농촌 학교인 해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이동안전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진도소방, 숙편한 꼭대과 현장방문 지도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관내 숙편한꼭대과(진도군 진도읍)를 방문해 대형 화재·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방문지도·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광주 남부소방,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및 캠페인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가을철 산악사고를 대비해 제석산 일대에서 산악사고 특별구조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독감 예방접종 이번주 시작...“생애 첫 접종 어린이 먼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21일부터 가능

3년 만에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번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전국 2만여개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무로 접종 지원 대상은 고령층, 임신부, 어린이 등과 같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약 1216만명이다.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439만명, 임신부 141만명, 만 65세 이상 어르신

763만명 등이다.

한 차례도 접종한 적이 없는 2회 접종 대상(1차 접종 후 4주 후 2차 접종 실시) 어린이의 경우 9월21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그 외 어린이와 임신부의 독감 예방접종은 오는 10월5일부터 가능하다.

고령자의 경우 만 75세 이상은 10월12일, 만 70~74세 이상은 10월17일, 만 65~69세 이상은 10월20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접종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독감 예방 및 전파 차단 관리를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마스크 착용과,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도 했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16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4~10일 1주간(37주차) 독감 의사

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 기준(4.9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가을인 9~10월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10년 10월1일 이후 처음이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검사 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독감 진단검사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적용받는다.

최이슬기자



신당역 출구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출구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18일 오전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노동자 휴게시설 잘 갖췄나” 대학·아파트 280곳 점검

8월18일부터 소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학교 및 아파트 2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근거해 올해 8월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 및 아파트 280개소를 선정해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사용인원 대비 크기의 적정성 ▲바다에서 전장까지 높이가 ▲벽·난방, 조명,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시



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경비 직종 근로자들의 휴게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개정 산안법은 모든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 면적은 최소 6㎡(1.8평)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18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서선욱기자